

통일국민협약안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통하여 스스로 마련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 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 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